

李대통령 첫 기자회견 뭘 담았나

민생·경제 본격 드라이브 예고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선언한 국정운영의 지향점은 타협과 통합의 정치, 서민경제 회생, 공공 및 민간부문 개혁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을 획득한 것과 관련,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며 국정운영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 운영은

이 대통령은 '4·9 총선'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정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엔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책을 펴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획득에 성공했으나 국회 모든 상임위를 장악할 수 있는 이른바

'절대과반'에는 실패한 것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기초에는 찬성하되 여당의 독주는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민'의 무게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변화의 기반에는 지난 두 차례의 선거에서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과거의 '돈 선거, 네거티브 선거' 관행을 벗어났다는 자신감이 있음을 강조했다.

여당 독주 없다... 타협·통합의 정치로

■ 경제 어떻게

이 대통령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일로에 있으나 이를 오히려 활용해야 한다며 5월 임시국회를 통한 민생법안 처리 등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간 처리키로 합의된 법안은 18대 국회 개원까지 기다릴 것 없이 17대 국회 임기 중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5월 임시국회를 요청했다.

5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 관련 법안으로 이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완화 관련법 ▲교원평가제도의 법제화 등을 꼽았다.

합정) 비준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완화 관련법 ▲교원평가제도의 법제화 등을 꼽았다.

세계 경제 위기는 곧 기회... 잘 활용해야

■ 사회 개혁은

최근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혁신을 역설했던 이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하향식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위에서는 그냥 있으면서 아래에 대고 요구

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대통령인 저부터 먼저 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변화는 자율적인 개혁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부터 변화겠다" 지도층 솔선 당부

■ 대북 정책은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초와 관련,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지난 10년간의 기존 틀이 새로 정립되는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전권의 대북정책 기초를 부정하

지는 양되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협력해 나

갈 것"이라며 "그것이 북한에 이로운 길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북한도 대화에 나서는 한편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북한도 변해야... 원칙 갖고 의연 대처"

李대통령 미·일 방문 실용외교 첫걸음 될 듯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일본 방문의 의미를 '실용외교의 첫걸음'으로 규정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해방이후 한국의 가장 중요한 맹방인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미래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동북아 이웃'인 일본과 서해정상의 화를 통한 협력 관계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회견에서 밝히지 않았다.

우선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지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세기 넘게 한·미 관계의 지난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한·미관계의 좌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인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신정부의 주창한 '비핵·개방 3000' 구상의 내용을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주요 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측이 최근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된 북한과의 협상이 주요 고비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핵

'한·미동맹 미래 비전' 큰 틀 합의 주력

日과는 경제중심 '협력 문제'에 초점

난 10년간 진보적인 정부 아래에서 정서적으로 다소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 대통령에게 사상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의 문을 연 것에서 상징하듯 양국 정상간 개인적 친분과 신뢰를 강화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미래의 한·미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엿보인다.

한국이 속해있는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핵심 이슈인 북한 핵문제는 물론 유엔에서의 협력방안, 범세계적인 테러대책, 국제평화유지활동(PKO), 환경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 보편적 이슈 등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측이 최근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된 북한과의 협상이 주요 고비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핵 폐기의 길로 나아가도록 한국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도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도 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는 과거사 등 미묘한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실용외교의 원칙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나가지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이미 이 대통령의 취임식 축하사절로 후쿠다 총리가 방한했을 때 이런 원칙에 공감한 바 있다.

또 이달 초 일본에서 만난 유명환 외교장관과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도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신시대' 개척에 뜻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뢰 구축의 첫 행보로 2005년 6월 이후 중단된 서해 정상의외교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美, 용산기지 이전비 등 부담 요청... 한국 대응 주목

미국이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다양한 요청을 쏟아내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해 왔다는 점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의 미국 요구 수용도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여론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미국은 한·미가 참여하게 맞서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전용문제에 대해 현직과 차기 주한 미군사령관을 통해 최근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

다.

윌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는 지난 3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 정부가 대부분 부담할 것이며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기지 통·폐합 이전 비용을 미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용에서 충당하라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쇄고기 수입 전면 개방, 주한 미대사관 부지 변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근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 조이트레블
 부동산·여행·항공·호텔·여행사
 대표 전화 (062) 234-3222

입원
 329,000
 369,000
 389,000
 399,000
 629,000
 449,000

5월 가계소득
 가계 소득 증대...
619,000
699,000

미국 비자 인터뷰 190,000
 미국 비자 인터뷰 190,000
 대표 전화: 062-234-3222